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영업제한 피해 기업은 6월까지 법인세 납부해도 된다

사업연도가 작년 12월 종료한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해야 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라면 세금납부는 6월까지 해도 된다. 통상 납부기한은 납세자의 신청으로 연장이 이루어지는데,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피해를 고려해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의무를 마치면 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했다. 세정지원 대상이라면 법인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납세자가 별도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세정지원(납기연장)이 적용된다.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이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긴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때 그 세액의 50% 이하)를 5월 2일까지, 중소기업은 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 세액공제 대폭 늘어난다

중견기업이 이차전지 개발을 위해 500억원을 지출하면 종전 40억원을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200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차전지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종전 8%에서 40%로 세액공제 혜택이 늘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라면 최대 50%까지(종전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사례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통해 반도체·배

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R&D·시설투자 관련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놴다. 이후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와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규정했다.

지난 9일에는 더 구체적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이나 차세대 이차전지, 항원을 이용한 백신 제조시설 등은 최대 16%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담겼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수소 생산시설 등 탄소중립 분야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디지털·저탄소 경제가 가속화되는 대외경제 환경 하에서 우리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투자 분위기가 조성되어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6월 지급때 정산까지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2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15일까지로, 이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정기분 신청, 5월1~31일)에 신청해도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장려금을 6월 말에 지급받을 때 정산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번 하반기분 지급부터는 정산 절차도 이루어진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해서 잔액을 6월 말에 지급한다. 이때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된다. 종전까진 연간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로 두 차례 나눠 지급한 뒤 9월에 정산 과정(추가 지급 또는 환수)을 거치는 구조였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조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